



주간통일정세 2014-22(2014.06.02~06.0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4-22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평양 축섬 방문... '과학기술전당' 건설 지시(6/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대동강의 축섬을 방문해 이곳에 '과학기술전당'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을 '축섬 개발사업' 현지지도에서 "과학기술지식 보급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당에서는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축섬에 현대적인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우기로(건설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부부, 과일농장공장 시찰... "수확고 높여야"(6/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의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농장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해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장군님(김정일)의 영도 업적을 길이 빛내나기야 한다"며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자면 과일의 정보당 수확고를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독려함.
  - 또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과수원의 지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며 "농장과 과수 연구 부문의 역할을 더욱 높여 과일 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윤정린 호위사령관 '상장'으로 강등(6/6, 조선중앙TV)**
  - 북한 윤정린 호위사령관의 계급이 대장(별 4개)에서 상장(별 3개)으로 강등된 사실이 6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됨.
  - 조선중앙TV는 5일 저녁 김 제1위원장의 증조부인 김형직의 묘에 헌화하는 행사를 방영했고 행사에서 윤정린이 상장 계급장을 달고 다른 간부들과 참석한 장면이 포착됨.
  
- **北 김정은, 만경대혁명학원서 '눈물' 보여(6/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소년단 창립 기념일(6·6절)을 맞아 '혁명 유자녀' 교육기관인 평양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걸음을 옮기던 김 제1위원장은 아이들이 울며 '아버지 원수님', '아버지'라고 외치자 걸음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눈가의 눈물을 닦았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김정은 동향

- 6/2, 김정은 黨 제1비서, 쑥섬개발사업 현지지도 및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금강하 물미끄럼대 관람(6.2, 중앙통신·중앙방송)
- 6/3,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제9차 전국 예술인대회(5.16~17)에 모란봉악단의 창작자·예술인들을 내세워 준 것 관련 '문학예술부문의 일꾼들과 창작자·예술인들이 창조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 혁신을 일으켜 나갈 것을 바라는 뜻과 기대가 어려 있다'며 '주체100년대를 주체문학예술의 최전성기로 빛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독려(6.3, 중앙통신·노동신문 중앙방송)
- 6/3,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꾼들과 어로공들에게 보내는 감사전달 모임, 6월 3일 진행(6.3, 중앙통신)
- 6/5,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대동강 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 과일종합가공공장 시찰(6.5, 중앙통신·중앙방송)
- 6/5, 김정은 黨 제1비서, 6월5일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에게 '대통령 再選' 축전 발송(6.5, 중앙통신·중앙방송)
- 6/7, 김정은 黨 제1비서,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여 교직원·원아들과 기념 촬영 및 새로 건설한 종합체육관을 찾아 건설정형을 요해하고 만경대혁명학원과 남포혁명학원 원아들의 배구와 농구경기 관람(6.7, 중앙통신·중앙방송)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 호소문 발표('13.6.4) 1주년을 맞아 김정은의 호소문은 '천만 군민을 끊임없는 대혁신, 대비약 속도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 기치'라며 '전체 군대와 인민은 조선속도 창조의 불길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6.4, 중앙통신·노동신문)
- '보천보전투 승리'('37.6.4) 77주년을 맞아 '보천보전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뒤통수를 보기 좋게 후려친 통쾌한 전투였다'며 '보천보의 총성은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메아리로 울려가고 있다'고 주장(6.4, 중앙통신)
- 불룩불가담운동(비동맹운동)은 "반제자주역량"이라며 '성원국들의 단결과 연대성에 기초한 공동행동 강화의 反帝투쟁' 주장 및 '우리(北)는 불룩불가담운동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피력(6.5, 중앙통신·노동신문)
- 박봉주(내각총리),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건설정형 현지에서 요해(6.6, 중앙통신·중앙방송)



## 나. 경제

- "北 5월 식량 배급량 소폭 감소"(6/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에게 배급한 식량이 4월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RFA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지난달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배급량이 410g으로, 전월 대비 10g 감소했다고 전함.
- "北 쌀값 5개월 만에 가파른 상승…춘궁기 원인"(6/3, 데일리NK)
  - 3일 대북매체 데일리NK의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평양과 신의주, 혜산의 쌀값은 4월 중순과 비교해 1kg당 각각 400원, 800원, 900원씩 대폭 오른 4천200원, 4천700원, 4천900원으로 나타남.
  - 데일리NK는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농사가 잘되고 배급도 이뤄져 쌀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식량이 떨어져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쌀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함.
- 北, 내년 黨 창건기념일 맞춰 대형사업 완료 독려(6/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북한 강원도 세포군 일대에 들어설 대규모 축산단지인 세포등판 건설 현황을 소개하며 "내년에 맞이할 당 창건 70주년까지 모든 건설을 끝낼 계획"이라고 보도함.
  - 김기남 당 비서는 지난 4월 10일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당 창건 70돌까지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훌륭히 완공해 어머니 당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독려함.
- "회령 가니 평양 온 기분"…北, 국경관광 연일 선전(6/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함경북도 회령시를 방문했던 관광객 인터뷰 기사를 실고 "잘 꾸며져 평양에 온 기분", "유치원 어린이들의 공연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중국 사람들의 주요 관광 대상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우며 이 관광상품을 크게 홍보함.
- 北에서도 도로사용료 징수…어떻게 하나(6/4,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4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2014년 1호:1월20일 발행)는 '부동산사용료 계산의 과학성 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논문에서 독립채산제 기업소에 부과하는 농업토지, 건물, 어장 등의 부동산 사용료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도로사용료 계산이 중요하다며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에서 도로사용료는 국가가 도로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따로 제정한 자동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소에 등록된 차종별 대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힘.



- **북중, 백두산 국경관광 2년 만에 재개(6/4, 연합뉴스)**
  -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에서 출발하는 백두산 동파(東坡) 코스 관광이 2년 만에 재개된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함.
  - 4일 연변주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허룽시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 양강도 대흥단군, 삼지연군, 백두산 동파 코스를 둘러보는 중국인 단체관광이 6월 중순 다시 시작될 예정임.
- **HP·IBM 등 美기업 68곳, 북한 중앙은행과 거래(6/4, 블룸버그통신)**
  - 미국기업 68곳이 경제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중앙은행과 거래하며 미국내 상당수 기업이 북한산 금을 자사 제품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전함.
  - 통신은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거래상대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라 미국기업 1천277개사가 전날 마감시한까지 관련 보고를 했으며 이중 67곳이 북한 조선중앙은행과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 **"올해 1~4월 북미 교역 급증...대부분 대북 지원품"(6/5,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들어 북한과 미국의 교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RFA는 미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4월 북미 교역액이 1천793만9천 달러(약 183억7천만 원)로 집계됐다고 전함.
- **중국 칭다오-북한 평양 전세기 관광 다음 달 개시(6/5, 청도신문망)**
  -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는 북한 4, 5일 관광이 다음 달 시작된다고 현지 인터넷 매체인 청도신문망이 5일 보도함.
  - 북한과 전세기 관광계약을 맺고 이 상품을 판매 중인 칭다오 국제여행사 관계자는 "현재 매일 접수되는 문의고객 수로 볼 때 다음 달 칭다오-평양 전세기 관광코스가 개통되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유엔공업개발기구, 北에 5개 환경지원사업"(6/6,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가 북한에서 5개 환경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함.
  - 이 기구는 지난 4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 대기오염 줄이기 위한 기술 지원 등 5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중국 단둥시, 북한 황금평 관광코스로 개발하기로(6/6, 연합뉴스)**
  - 중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가 단둥과 접경한 북한 황금평 경제특구를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관상(潘爽) 단둥시 부시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단둥 북중 종합박람회는 이전 행사보다 관광협력과 문화교류의 비중을 크게 늘릴 것"이라며 "단둥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박람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황금평 관광과 북한 자가용 관광을 개시해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야 한다"고 주문함.

● "北, 러시아에 접경지역 다리 건설 제안"(6/7, 자유아시아방송(RFA);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를 인용해 리룡남 북한 무역상이 6일 블라디미르 미클루세프스키 주지사를 만나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산역 사이에 차량용 교각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함.
- 한편 리 무역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연해주 지방에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유류제품과 농업가공품, 경공업원료 등을 수입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며 미클루세프스키 주지사는 연해주 농업기술단지 건설 사업에 북측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내달 초 평양~상하이 직항노선 개설"(6/7, 미국의소리(VOA))

- 북한 고려항공이 내달 초부터 3개월 동안 평양과 중국 상하이를 잇는 직항노선을 운항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이 노선은 다음 달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주일에 두 차례씩 운항한다. 매주 목요일 여객기가 푸둥(浦東) 공항을 떠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며 일요일에는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는 방식임.

● 중국 연변대, 북한 나선특구 개발 참여(6/7, 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연변대학이 북한 나선 경제특구 개발에 인력과 기술,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연변대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 '북중 나선경제무역구 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와 협력 합의를 체결했다고 7일 밝힘.
- 연변대는 박영호 총장과 공동관리위 왕용강(王永剛) 주임이 서명한 이번 합의서에 따라 나선특구 개발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및 교류, 기술 협력,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중국 관광객들(40여 명, 올해 8회차)의 5월31~6월2일 '나선일대 자가용차관광(비파섬 등 탐승노정, 나선대흥무역회사·나진항 등 경제대상들 참관)' 진행(6.2,중앙통신)



- 사리원방직공장 노동자들 속에서 '5월말 현재 270여 명의 연간계획 완수자 - 상반기계획 완수자들 배출 및 4월말 현재 연간계획 101.5%초과 수행' 선전(6.2, 중앙방송)
- 北 각 부문, 5월 인민경제계획 초과 수행(6.3, 중앙방송)

#### 다. 사회·문화

- "北 교수 6명, 내달부터 캐나다서 연수"(6/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대학교수들이 다음 달부터 캐나다에서 연수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함.
  - 김일성종합대, 인민경제대, 원산경제대, 평양외국외대 등의 북한 교수 6명은 7월부터 6개월간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에서 경제, 경영, 무역, 금융을 배울 예정이라고 RFA가 전함.
- 北 노동신문 "모란봉악단 창조기풍 따라 배우자"(6/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3일 북한판 걸 그룹으로 알려진 모란봉악단을 또다시 문화 예술인들의 '본보기'로 치켜세움.
  - 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열린 예술인대회 연단에 모란봉악단 구성원들을 세운 것은 "모든 창작자,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을 적극 따라 배워 문화예술 창작창조활동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나갈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힘.
- 北신문 "모든 소년단원은 김정은만 믿고 따라야"(6/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조선소년단 창립 68주년인 6일 1면에 실은 사설 '소년단원들을 주체혁명의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자'에서 "모든 소년단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로 철저히 준비시켜나가야 한다"고 독려함.
- 北, 아동복지단체 '어린이후원협회' 설립(6/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아동복지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조선어린이후원협회;를 설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어린이후원협회가 "어린이들의 근본 권리를 옹호하고 건강, 영양, 지능발육, 생활 관련 봉사를 개선하며 그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 강성국가의 담당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정부의 사업을 방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함.
  - 또 협회는 최고결정기관인 '성원 총회와 그 아래 '집행이사회'로 구성되며 "중앙급 옥류아동병원과 각 도 안의 육아원(고아양육시설)과 탁아소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후원한다"고 설명함.



- "FAO, 향후 5년간 北 가축방역체계 개선"(6/7,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앞으로 5년 동안 북한의 가축 방역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샌드라 페라리 대변인은 FAO가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측 관리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며 '북한 방역체계 개선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양측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함.
  
- 北, 각종 체육시설 선전하며 "금메달로 보답" 독려(6/8, 노동신문)
  -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석 달여 앞둔 북한이 각종 최신 체육시설을 선전하며 "당의 믿음과 사랑에 금메달로 보답할 것"을 독려함.
  - 노동신문은 8일 '물 위에 뜬 꽃바구니-능라도에 세차게 일어번지는 체육 열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년 전 완공돼 운영 중인 평양국제축구 학교를 소개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청춘거리 체육촌(평양시 만경대구역)의 '종합적인 체육문화기지로 개건·운영(종목별 경기관들과 축구경기장·체육인식당 등 면모일신, 체육기자재 구비 등)' 선전(6.2, 중앙통신)
- 北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의약품들 소개(실리마린간염알약·노발간염수액, 간염·간질환치료제) 등 "보건실천에 기여" 선전(6.5, 중앙통신)
- 北 축구선수, 2014년 아시아축구연맹 14살 미만 여자 지역별 선수권대회(5.30~ 중국 하북성) 1위 쟁취(6.5,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 소년단창립 68돌 경축 제52차 전국 학생소년예술축전 종합공연, 6월 6일 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6.6, 중앙통신)
- 北, 비영리단체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설립(6.7, 중앙통신)
- 北 박진향 선수, '2014 아시아주니어 레슬링선수권대회'(몽골) 여자자유형 44kg급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6.7, 중앙통신)
- '김정은 지시 관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교직원들 쫓기모임, 6월7일 김진해(평양시 黨 위원회 비서)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6.8, 중앙방송)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눈보라창작단, 다부작 예술영화 '포성없는 전구' 제1~5부 창작 발표(6.8, 중앙통신)
- 김현경(女 자유형 48kg급) 신철우(男 자유형 50kg급) 선수, 6월7일 2014년 아시아청년 레슬링선수권대회(몽골) 우승·동메달 입상(6.8, 중앙통신)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납북자 재조사 협의차 北당국자 방일 추진"(6/2, 교도통신)**
  - 납북 일본인 재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 당국자가 일본을 방문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납북자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북한 당국자를 일본으로 불러 실무자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조선신보 "北日, 국교정상화 지향은 괄목할만한 일"(6/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스웨덴 스톡홀름 회담 합의를 계기로 "일본이 북한에 일방적인 요구만 해온 불합리한 구도가 청산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2일 '메아리'라는 코너에서 납치문제만을 내세우며 대북 고립정책을 펴 온 일본 보수정권이 이번 합의에서 북한의 외교적인 노력을 인정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함.
  - 또한 "합의에 제일 조선인 지위문제를 포함한 것은 일본 정부가 총련·제일동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조사 등 과거청산 문제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함.
  
- **일본 외무상 "납치문제 해결위해 총리 방북도 검토"(6/3, 교도통신)**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답변을 통해 "납치문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방북 건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다만 아베 총리의 구체적인 방북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임.
  
- **北 송일호 "北日,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행동해야"(6/4, 조선신보)**
  - 북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가 "양국이 포괄적인 범위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행동에 옮겨 관계 개선 분위기를 더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3일 전함.
  - 그는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합의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억측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며 "합의정신과 상반된 논조가 여론화되면 북일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함.
  
- **"북한, 납치재조사 협상 때 일본에 쌀의약품 요구"(6/4, 교도통신)**
  - 북한이 지난달 납북 일본인 재조사 문제를 협상하면서 일본 정부에 쌀과 의약품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함.
  -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 차원의 인도적 물자



수송을 용인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밝힘.

● **北매체, 중리 친선 부각... "美패권주의에 타격" 주장(6/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지난 4일 '관계발전을 추동한 중리수뇌상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5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상하이 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함.
- 신문은 중리 정상회담에 대해 "두 나라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전망을 열어놓은 의의 있는 계기"라며 중리 간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약, 해군 합동군사훈련 등의 협력 내용을 소개했다.
- 조선중앙통신도 5일 '객쩍은 허세'라는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이 밀접해진 중리관계에 대해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의미를 애써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 "북일 합의, 양국 간 '고유 문제'에 관한 것"(6/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북일 간 남북 일본인 재조사 합의가 양측의 '고유한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5일 관계개선의 로드맵, 조일(북일) 정부간 합의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등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마알남조선이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면서 조(북)일 관계의 진전에 썩기를 막으려고 할 지도 모른다"며 "반론의 유효한 수단은 '조선과 일본에는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고유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힘

● **송일호 "조사위구성 조정 중...책임감 있게 준비"(6/5, 교도통신)**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북한과 일본의 합의에 따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전면 재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내부 조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5일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송 대사는 납치 피해자를 포함해 관련된 모든 일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사가 "예전의 (납치문제) 조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과 일본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조사위원회의 발족 시거나 조사 기간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음.

● **北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출범 환영"(6/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출범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내각 총리 명의 축전을 보냈다고 5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의 문답에서 "팔레스타인 민족 통일정부 수립을 환영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민족 해방운동과 이슬람교 항쟁 운동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힘.



- **"북러 나진항에 러시아 보조함대 주둔 논의"(6/5, 러시아의소리)**
  -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항에 드나드는 대형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러시아 보조함대를 항구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5일 보도함.
  - 북한은 러시아 극동 국경지역인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철도와 관련 "24시간 철도 안전과 북한을 거쳐 제3국으로 운송되는 화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함.
  
- **"파나마 검찰, 北 청천강호 선장에 징역 8년 구형"(6/6, 미국의소리(VOA))**
  - 파나마 검찰이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전함.
  
- **北 "미국인 에드워드 포올레 억류" 발표(6/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지난 4월29일 관광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들어온 미국 공민 제프레이 에드워드 포올레는 체류기간 관광의 목적에 맞지 않게 공화국법을 위반한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밝혔음.
  - 이어 "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그를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美 국무부 "미국 시민 북한 여행하지 말라" 강력 권고(6/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방북한 미국인 관광객을 억류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미국 시민들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시민은 이번이 세 번째"라며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시민의 안녕과 안전이 미국 정부의 최고 우선순위"라고 밝힘.
  
- **일본정부 "납북 의심자 명단 북한에 제출"(6/8, 교도통신)**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8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 "특정 실종자 명단도 포함해 (납북 피해자 명단을)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아울러 스가 장관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향한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더라도 북일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 기타 (대외 일반)

- 리수용 외무상(北 정부대표단 단장), 6월1일 쿠웨이트에서 아시아올림픽이사회 위원장 및 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 총국장과 각각 회담(6.2, 중앙방송·중앙통신)
- 北, 6월 2일 韓美의 '인권유린행위'를 주장하는 자료들을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A/68/869-S/2014/321호)으로 배포(6.3, 중앙통신)
- 北 정부 대표단(단장: 리수용외무상), 6월 2일 쿠웨이트 추장계승자·민족회의 의장·내각사업담당 국무상을 차례로 만나 담화(6.3,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이 '고노 담화' 검증을 위한 검증팀 만들고 첫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뒤집고 군국화, 우경화를 다그쳐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하며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6.4,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온 세계의 자주화는 '인류자주 위업의 당면한 투쟁목표'라며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나라 인민들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6.4,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오바마 대통령의 對北 '전략적 인내' 정책은 "어리석은 망상으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美 북핵 전문가 등 '北과 대화재개 추진' 전언 및 '對北정책 전환' 지속 주장(6.5, 중앙통신)
-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원조 관련 '군사적 장악·통제와 신 식민주의 지배를 실현하려고 획책하는 이기적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검은 속심을 절대 감출 수 없다'고 비난(6.6, 중앙통신·노동신문)
- 리수용 외무상(北 정부대표 단장)↔감비아 외무상(아부바카르 아브둘라흐 쉐고르) 회담, 6월5일 감비아 외무성 청사에서 진행(6.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화 전시회(김정일 黨 사업 시작 50주년 관련), 6월1일~5일까지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서 진행(6.8, 중앙통신)

#### 나. 6자회담(북핵)

##### ● 北통신, 美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은 "어리석은 망상"(6/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시간에 쫓기우는 미국'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는 어리석은 망상을 고집한다면 북미 핵대결의 최후 승리는 정의의 핵을 틀어쥐고 있는 조선에 있다는 역사의 이치가 미국의 종말로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또 북한의 1~3차 핵실험과 올 초 미사일 발사훈련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대국적인 자세로 미국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면서 여유 있게 대화와 평화의 기치를 더 높이 들었다"고 주장함.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지방선거 개입 노골화…"새누리당에 표 주지 말자"**(6/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인민을 우롱하는 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고 집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 김관진 새 안보실장 또 비난…"대결에 맨 앞장서"**(6/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쇠를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망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군이 최근 북한에 대한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며 "남조선 호전광들의 반공화국(반북) 대결 망둥의 맨 앞장에는 극악한 군사강패인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 역도가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 자는 최근 언론들이 청와대 안보실장 후보로 자기를 거론하자 더욱 기세가 올라 박근혜에게서 점수를 따려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헤엄치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김 장관의 국가안보실장 임명 사실은 언급하지 않음.
  
- **北 매체, 안보실장·국방장관 인사 비난…"대결 의지"**(6/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4일 김관진 국방장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명과 한민구 전 합참의장의 국방장관 내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반공화국(반북) 대결' 기초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의 '편집국 논평원'은 4일 기자와의 문답에서 "김관진 역도가 김장수의 뒤를 이어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올라왔을 것을 두고 내외 여론은 박근혜가 계속 반공화국 대결과 전쟁 책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여놓겠다는 흥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주장함.
  
- **北, 김관진 안보실장 임명 비난…"남북관계 개선 없다"**(6/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관진 국방장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명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함.
  - 통신은 4일 '또 하나의 기만극'이라는 논평에서 "현실은 남조선에 김관진과 같은 악질 대결광신자들이 있는 한 북남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될 수 없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는 극악무도한 대결광신자를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하여 초래되는 모든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함.



- **北 "南 지방선거, 집권세력에 경종"(6/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7일 지방선거 결과를 전하며 "분노한 남조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이번 선거 결과는 집권층을 비롯한 보수정치권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함.
  - 방송은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역사도 17곳 가운데 과거보다 1곳 늘어난 9곳을 석권했다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큰 차이로 이기고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20곳에서 후보를 당선시켰으며 호남 지역과 남조선 강원도 지역을 계속 차지했을뿐 아니라 보수의 지지 기반으로 돼온 충청도 지역을 탈환했다"고 강조함.
  
- **北, 615선언 연일 부각... "남북관계 발전의 초석"(6/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8일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대단합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며 "북남공동선언이야말로 북남관계 발전의 초석"이라고 강조함.
  - 이어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바란다면 615공동선언을 옹호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임.

####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신문 "北인권사무소 한국 설치는 정치적 도발"(6/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인권유린자들의 모략 소동은 통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에 대해 "우리 공화국(북한)의 존엄높은 영상(이미지)을 흐려놓음으로써 동족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추후도 용납할 수 없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이며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함.
  
- **北 '귀순 의사' 선원 2명 송환 촉구... "부당하게 억류"(6/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5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측이 표류 선원 2명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면서 "선원 전원을 즉시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결과)에 대해 남측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측은 "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해 자기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초보적인 인도주의 원칙이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관례"라며 "선원들을 직접 대면도 못하게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비난함.



#### ■ 기타 (대남)

- 우리 군부의 '反北 도발소동확대(NLL 침범 北 경비정 등에 경고 사격 등)' 왜곡 주장과 함께 '맨 앞장에는 국방부 장관 김관진역도가 있다'며 "괴뢰호전광들을 징벌해야 한다"고 위협(6.2, 중앙통신·노동신문)
- 6.4지방선거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표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고 '새누리당 후보 낙선' 선동(6.2, 중앙통신·노동신문 중앙방송)
-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각계층의 반정부 투쟁 등 관련 '박OO패당이 반정부투쟁 열기를 막기 위해 발악할수록 멸망을 더욱 재촉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6.3, 중앙통신)
- 용인시에서 일어난 미군의 성추행 사건(5.31) 등을 거론하며 '미군 범죄행위는 하루도 그칠새 없이 감행되고 있다'고 비난 및 '박OO와 같은 친미분자들이 사대매국정치를 하고 있는 한 미군 범죄행위는 절대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6.3, 중앙통신)
  - 北 적십자 중앙총대변인 담화(6.5), '귀순의사 표명' 北 선원 2명에 대한 남한 당국의 "부당한 억류"를 주장하며 "즉시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위협(6.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관진 국방부 장관(5.31 싱가포르, 제13차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 발언(北 체제 취약성·내부모순 등) 비난과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에 대해 '남북관계가 더욱더 파국상태로 치닫고 한반도에서 새 전쟁, 핵전쟁 위험이 증대될 것'이라고 공세(6.5, 중앙통신·민주조선)
  - 우리 정부의 '북풍 조작책동(北, 4월 핵실험설·국지도발 가능성 등)'을 지속 주장하며 이는 "세월호 대참사의 판세를 돌려보려는 악랄한 정치적 음모의 일환"이라고 비난(6.5, 중앙통신·논평)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65호(6.6),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에 임명 한 것 관련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라며 '전쟁광신자를 계속 끼고 돌다가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위협(6.6,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 논평] 우리 정부 개각(국무총리,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관련 '군부정치로 유신 독재시기처럼 남조선을 파쇼와 암흑천지로 만들고 남북대결을 더욱 고착하려는 것이 박OO가 벌리는 정부개각놀음의 진상'이라고 비난(6.6,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6월 4일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선거가 있었다'며 '분노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이번 선거결과는 괴뢰 집권층을 비롯한 보수정치권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고 선거결과 보도(6.7,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에서 진행되는 韓美 합동군사훈련(6.9~7.1, 美 캘리포니아 주)과 우리 동해에서의 연합해상훈련을 거론하며 '남조선 호전광들은 대참사로 궁지에 빠져들게 되자 전쟁소동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미제와 야합하여 핵선제 공격연습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6.7, 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전제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구상을 "반민족적인 체제통일 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간특한 요설, 북침핵전쟁도발 기도"라고 왜곡 비난(6.8, 중앙통신·노동신문 중앙방송)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에 대해 "남북사이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조금도 바라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공세 지속(6.8,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문승진·리경순(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우동 사무장·32인민반장), '귀순의사 표명' 北 선원 2명 송환 촉구 반향(6.8, 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두 달 만에 만나는 韓美 6자 수석...북핵 대화 출구 나올까(6/2, 연합뉴스)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일(현지시간), 지난 4월초에 이어 약 50여일 만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장기교착화 된 북핵 대화흐름에 변곡점이 형성될지 주목되고 있음.
-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공동대응을 모색하느냐가 향후 대화 재개 흐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기적으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에 이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미중 3국이 조율한다는 의미도 있음.
- 일각에서는 6자회담 재개에 드라이브를 거는 중국과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회의를 느끼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의 중재역 모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황 본부장의 "한미중 3국이 적절한 대화재개 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 핵 추구 상대와 대화 불가...비핵화 마음이 중요(6/3,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헌법에 핵보유를 명기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는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은 전적으로 북한이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병진노선 포기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거나 헌법에서 핵보유를 삭제한다면 중요한 진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조만간 중국 측과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음.
- 한편 우리 측 6자회담의 황준국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수석대표와 회담을 갖고, "양측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나. 미북 관계

##### ● 도널드 "北, 이란과 달라...제재 효과 보기 어려워"(6/3, 연합뉴스)

- 톰 도널드 前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실(TFI)의 외교적 역할' 세미나에서 "북한과 이란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면서 "국제경제와 단절



- 된 북한에게는 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도널던 전 보좌관은 "이란의 금융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연계되었고 석유 거래 규모도 워낙 크지만 북한은 달러에 기반한 경제체제도 국제경제에 편입된 구조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부시 행정부가 성공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 때 대북제재에 관여했던 스티븐 헤이들리 前국가안보보좌관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통해 김정일의 개인자금을 장악할 수 있었고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 다. 일북 관계

- **일본 관방장관 "필요하면 북한 당국자 방일 요청"(6/2,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일, 북한 당국자의 방일 가능성에 대해 "일본인 납북자, 특정 실종자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북한 당국자를 초청해 정보 제공을 요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납북자 조사에 착수한 단계에서 일북간 인적 왕래 규제 등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베 총리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북한의 재조사 이행 과정에 앞서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송일호 알북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이날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베이징 공항에서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당국자 등의 방일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 **북한 '핵무기 포기 못해' 일북협상서 밝혀<日신문>(6/5,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은 4일, 일본이 지난달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일북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에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실행하지 않도록 지속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핵개발과 경제 재건을 동시에 추진할 뜻을 명확히 했는데, 일본은 이를 확인하고도 납북자 재조사에 따른 단독 제재 해제에 합의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지난달 29일 발표된 일북 합의문에 핵미사일 등에 관한 조건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은 북한의 이와 같은 언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며,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달 30일 "마일은 계속해서 북한 핵미사일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라 강조한 바 있음.



라. 러북 관계

● 러시아-북한, 무역대금 루블화로 결제(6/5, 연합뉴스)

- 러시아 리아노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 양국은 5일(현지시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부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무역 대금을 달러 등의 경화가 아닌 러시아 통화 루블화로 결제하기로 합의했음.
- 러시아 측의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루블화 결제가 양국의 경제협력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으며 북한 내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러시아의 참여와 북한이 무역 대금을 지하자원으로 결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음.
- 또한 북한은 러시아 투자자들의 비자 취득 간소화 절차와 북한 내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러시아에 다가가면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마. 기타

● EU, "북한 핵실험 위협 깊이 우려"(6/4, 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음.
- EU는 이 성명에서 "북한의 모든 활동은 핵개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핵개발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입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앞으로 어떠한 도발적인 행동과 언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앞서 북한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위협한 바 있으며, 최근 북한을 촬영한 미국의 상업 위성사진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음.

● G7 정상회의서 북한 핵납북자 문제 관심 모아(6/5, 연합뉴스)

- 브뤼셀에서 4~5일(현지시간)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내전, 이란 핵문제 등 글로벌 이슈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와 인권침해 대책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공동선언에 포함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연합지도자들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음.
- 한편,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



(對)북한 정책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박근혜 대통령 '핵도미노' 발언에 美외교가 예민한 반응(6/2,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주변국들에 독자적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해 핵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난달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 발언에 워싱턴 외교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
  - 이는 워싱턴의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은 일정시점에 가면 핵보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속에 나왔기 때문으로,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현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 또한 나오고 있음.
  -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도미노가 시작된다면 미국이 60년 넘게 구축해온 동아시아 동맹체제가 종식될 것"이라 말했으며, 데이비드 산타로 CSIS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미국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 **美 '사드' 韓배치 검토 공식화...MD 논란 '심화'(6/3, 연합뉴스)**
  -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3일,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 측의 첫 공식 언급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요격체계 구매 압박이 아니냐는 시각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음.
  - 그는 "사드는 상당히 많은 역량을 갖춘 체계로 기 보유 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혀 도입 검토가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으나 1개 포대에 2조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국방비 감축 중인 미국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의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논의 본격화에 합의한 것이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우리 국방부는 당장 MD 요격체계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나. 한중 관계

- **외교부 "한중 어업협정상 NLL서 申어선 조업 불법"(6/3, 연합뉴스)**
  -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3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일부



지역의 조업권을 중국에 팔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NLL 지역은 한중 어업협정 상에서도 중국이 인정한 지역으로 중국 어민이 그쪽에서 조업을 하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 NLL 지역에서의 중북간 어업 관련 계약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속 파악 중"이라며 "한중 어업협정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주권적 권한 행사에 관한 법률에 특정 금지구역이 있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 어민들만 조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중국 어선의 NLL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과 관련 "그간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불법 어업행위를 방지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중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 **한중, 내주 베이징서 공공외교포럼 개최...협력 가속화(6/5, 연합뉴스)**

- 외교부 관계자는 5일, "한중 양국이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공공외교 포럼을 개최한다"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 문제를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 양국간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 '아름다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양국의 공공외교 담당 인사들이 대거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간 공공외교 정책협력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족된 이번 행사 개최는 이 포럼이 정례화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이번 포럼에서는 참석자들이 양국의 공공외교 정책을 발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드라마 등과 관련된 방송문화 분야와 미래 세대와 관련된 교육 분야에 대한 공공외교 방안도 함께 모색될 예정임.

다. 한일 관계

● **日정치관지자체 도쿄 북판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6/5, 연합뉴스)**

-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 단체와 시마네(島根)현 시장회와 어협 등으로 구성된 시마네현민회의는 5일,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하자고 하는 등 지금까지 이상으로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독도문제를 다룰 것을 주장했다.
- 일본 정부는 이 집회에 고토다 마사즈미(後藤田正純) 내각부 부(副)대신(차관)을 참석시켰으며, 그는 "우리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를 국민 전체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음.
- 반면, 민주당 정권 시절에 비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온 아베 정권이 참석 인사의 급을 대신(장관)으로 올리지 않고 부대신으로 유지한 것은 한일관계에 미칠 타격을 일부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정부는 5일, 일본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부 고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연 것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했으며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음.

● **北핵위협 맞서 한일 군사협정 맺어야(美전문가)(6/5, 연합뉴스)**

-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 절하나 점진적 제재 증대가 아닌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THAAD)를 구매하고 일본과 군사정보교류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클링너 연구원은 2012년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무산은 한국에서 급증한 민족주의 때문이라 지적했으며, 한국이 '동맹국간 통합 미사일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탓이라고 분석했음.
- 한국이 독자개발하려는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또한 레이저무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요격 수단이나 지상발사 요격체계의 개발 재개와 '아시아 중심'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군사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라. 마·중 관계

● **중국, 유엔미국의 '텐안먼 사태 성명'에 반발(6/4,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텐안먼(天安門) 사태 25주년인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과 미국 등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인권보장 등을 촉구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음.
- 또한 "중국의 인권사업이 이뤄낸 중대한 성과는 논쟁의 여지없이 확실하며 중국이 가는 인권의 길은 실질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했으며, 티베트인이 더 많은 자주권을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티베트를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 텐안먼 사태와 관련해서도 "1980년대 말 중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풍파 및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찌감치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개혁개방 30여 년간 경제사회의 발전은 위대한 성과를 거뒀고 민주법제 체계도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음.

마. 마·일 관계

● **오바마, 아프리카 PKO에 일자위대 참여확대 요청(6/3,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3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4일 아베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가 적극



적으로 참가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치안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을 거론하며 일본이 더 많은 PKO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15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구상을 밝히면서 PKO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마일 정상회담 때 논의된 자위대의 PKO 참가 확대와도 맞물린 것으로 보임.

#### ● 캠벨 "日집단자위권 용인하면 중일대화 가능성 커져"(6/3, 연합뉴스)

- 1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 관여한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아태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 개별 자위권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측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 캠벨은 2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중일 관계는 긴장감이 매우 높지만,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일본의 입장이 강경해지면 중국과의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 또한 연립 여당의 수장으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에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아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도 만나 미국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아마구치 대표를 설득했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보도했음.

#### ● 알북 협상 일본대표, 이르면 내주 방미<日언론>(6/4, 연합뉴스)

- 지지통신은 4일, 알북 정부간 협상의 일본측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르면 내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한다고 보도했음.
- 이하라 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알북 협상에서 합의한 납치 문제 재조사와 대북 독자 제재 일부 해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도모할 전망이다.
- 한편, 한국 정부 소식통은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알북 회담 후 이하라 국장으로부터 알북간 합의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으며, 이하라 국장은 이달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담을 위해 방한 예정임.

#### ● 오바마-아베 '냉각기'...G7회의서 회담 대신 5분대화(6/6, 연합뉴스)

-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타진했으나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5분간 서서 대화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음.



- 성사되지 않은 것에는 실무적인 이유가 작용했겠지만, 지난 4월에 마일 정상회담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고, 특히 최근 일본의 행보에 미국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실제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말을 해 오바마 대통령과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와 같이 주요 현안에서 철저히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보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

## 바. 마러 관계

### ● 오바마 유럽 3개국 순방...對러시아 압박 강화할 듯(6/2,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러시아가 아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추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3일부터 시작될 유럽 방문을 통해 각국 정상들에게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제외된 G7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러시아에 너지 의존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해 단결된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경제의 핵심을 겨냥한 제재에 신중한 입장인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근 진전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적인 제재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 푸틴, 오바마우크라 정상 면담...우크라 사태 논의(6/7, 연합뉴스)

- 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식 참석 차 프랑스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노르망디 베누빌성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으며, 이는 10~15분간의 비공식 면담이었다고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전했다.
- 로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인을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될 것"이라 경고했다고 말했다.
- 푸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짧은 면담이 "긍정적이고 실질적이었다"고 말했으며,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브뤼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 달 기한을 제시하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음.



#### 사. 중일 관계

- **中** 탕자쉬안 前국무위원, 중일관계 개선 의욕<교도>(6/5, 연합뉴스)
  -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국무위원이 5일 일본에서 열린 '신(新)중일 우호 21세기위원회' 비공식 회의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중일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일본에 왔다"고 말하며 양국관계 개선에 의욕을 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중국 외교부장과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을 역임한 탕 전 국무위원은 중일 우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현재도 중국의 대일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의 발언은 중국 지도부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분석했음.
  - 중일 양국 지식인들로 구성된 '21세기 위원회' 정식 회의는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 조치를 계기로 중단된 바 있으며, 금번 '비공식' 회의는 6일까지 진행되면서 중일관계 개선책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임.
  
- **日**정부방산업체 노린 사이버공격..."발신지 중국"(6/5, 연합뉴스)
  - 5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公安부가 일본의 중앙부처와 방위관련 기업, 유럽 내 일본 대사관 직원 등이 사용하는 PC 약 100대 이상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수사한 결과, 발신지가 대부분 중국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음.
  - 바이러스는 감염된 PC를 중국 서버에 강제로 접속시켰고 바이러스를 전파한 이메일도 중국인이나 중국 회사명의로 취득된 도메인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PC에서는 1년 반에 걸쳐 약 40만 차례 부정 접근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언론은 전했다.
  - 또한公安부는 사건이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기밀을 노린 조직적인 공격인 것으로 보고 인터폴(ICPO)을 통해 중국 당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기밀 유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아. 중러 관계

- **중**국러시아 합작 신용평가기관 만든다(6/3, 연합뉴스)
  - 이타르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많은 국가가 신용평가기관의 객관성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며 중국과 합작해 새로운 신용평가기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는 새 신용평가기관이 기존의 서방 신용평가기관을 모델로 삼을 것이라면서도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며, 향후 타국에도 서비스를 제공



하는 국제적 수준의 기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 또한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이 상호 교역 결제 수단으로 양국의 통화를 사용하는데도 합의했는데, 지난달 21일에는 양국이 10년 이상 끌어오던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약에 서명하는 등 최근 들어 러시아와 중국은 유례없는 협력과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있음.

#### 자. 일·러 관계

##### ● 일본·러시아, 중국의 '텐안먼 사태'에 시각차(6/2, 연합뉴스)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텐안먼(天安門) 사태' 25주년을 앞두고 일본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반면 러시아 언론은 '침묵'을 지키는 등 양국 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일본의 일부 시민단체는 1일 도쿄에서 텐안먼 사태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열었으며 일본 언론 매체들도 "사태 발생 후 25년이 지났음에도 중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지 않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됐다"고 비판했음.
- 반면 러시아는 사태 25주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VOA는 전했으며, 러시아 정계 인사인 파티보른 라비제니키는 "러시아 사회는 통상 자국에 영향을 주는 사건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텐안먼 사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음.

##### ● 방일 푸틴측근 "쿠릴협상 용의...日 독자정책 취해야"(6/3, 연합뉴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 의장은 3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
- 나리슈킨 의장은 "일본은 국익을 존중해가며 보다 자립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 이는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여 온 쿠릴 4개섬 협상을 미끼로 일본을 대 러시아 제재망에서 이탈시키려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풀이되고 있음.
- 나리슈킨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서방으로부터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로, 도쿄에서 열린 '러시아 문화 축제' 개막식 참석을 명목으로 일본을 방문했으며 일본은 미국 등 서방의 '눈총'을 무릅쓰고 그의 방일을 수용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개인 운영 '별이 버스' 북한 만성 교통난 해소(6/2, 자유아시아방송)**
  - 만성적인 전력 사정으로 북한에서 열차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별이 버스들이 열차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다녀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음.
  - 최근 모내기철을 맞아 발전소 전력이 농촌으로 집중된 결과, 북한 열차들이 제대로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바쁜 여행객들과 상인들은 주로 별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음.
  - 평성시는 함북도선과 양강도선, 황해도선 등 전국 각지로 뻗어가는 버스 노선이 있는 경유지로, 북한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이러한 교통망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별이버스는 장사 목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람과 짐 수량에 따라 돈을 받아 한 사람당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 자강도에서 도매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방모 주민은 "별이버스들은 대당 가격이 보통 1만 달러로, 중국에서 운행되던 중고 버스를 개인들이 들여다가 국가 기업소에 등록시켜놓고 운행한다"면서 "부속품과 휘발유는 일체 주인이 대고 이익금의 일부를 기업소에 바치는 식이다"고 설명함.
  - 하지만, 그는 "별이버스나 대형 트럭으로 장사하자면 '뒤를 봐주는 백'이 든든해야 한다"면서 "힘없는 사람이 버스를 움직이다가는 하루아침에 회수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음.
  
- **북, '검열' 정보 흘린 인민반장 다수 처벌(6/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사법기관의 검열이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거나 무원칙하게 주민들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많은 인민반장들을 자격박탈 하거나 처벌했다고 북한 현지 소식통들이 전함.
  - 지금까지 북한에 그나마 민주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선거방식이 바로 인민반장 선거로, 거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당국의 온갖 검열과 통제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있었음.
  -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인민반장 선거마저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는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될 것이라고 여러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우려했음.
  - 시당과 시인민위원회, 사법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상투쟁회의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며, 이번 회의로 인해 처벌받거나 자격을 박탈당한 인민반장들이 다수 있음.



-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이번 회의에서 혜탄동 17만 인민반장과 혜강동 2만 인민반장이 주민들의 밀수를 눈감아준 혐의로, 혜강동 11만 인민반장이 비밀연락망을 통해 검열성원들이 도착한다는 사실을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 그는 이런 문제들로 하여 앞으로는 인민반장도 철저히 검증된 노동당원들, 여성제대군인 출신들을 위주로 각 인민위원회에서 선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동사무장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언급함.
- **北, 귀순 희망 2명 대면 요구..."회피하면 강제 납치"(6/3, 파이낸셜뉴스)**
- 북한이 최근 우리 해경에 의해 구조된 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대면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
  -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조선적십자회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선원 2명을 판문점에 데리고 나와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남측이 우리측의 요구를 회피하는 경우 강제 귀순에 의한 납치로 인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정부 당국자는 "일종의 망명을 한 이들을 복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문점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도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며 "북측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해경은 지난달 31일 울릉도 인근 동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어선(1.2t) 1척을 구조했으며, 선박에 타고 있던 북한 모 사업소 소속 어부 3명 중 2명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에 따라 3일 오전 11시께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음.
- **北 신문 "北인권사무소 한국 설치는 정치적 도발"(6/4,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4일 '인권유린자들의 모략 소동은 통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에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음.
  - 신문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에 대해 "우리 공화국(북한)의 존엄높은 영상(이미지)을 흐려놓음으로써 동족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이며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함.
  - 또한 송과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비롯해 한국의 사회문제를 보여주는 각종 사례를 열거하며 "제 집안은 이처럼 사람 못 살 인간 생지옥,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로 만들어놓은 박근혜 패당이 인민대중 중심의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악의에 차서 헐뜯는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뻔뻔스러운 추태"라고 덧붙였다.



- **북한 "미국과 한국에서 오히려 인권침해 심각"(6/5, 연합뉴스)**
  - 북한 유엔대표부는 4일(현지시간) 인권 침해가 심각한 곳은 북한이 아닌 미국과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제안서'를 회원국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유엔 공식문서로 등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이 문서는 이날부터 유엔 공식문건으로 기록됐음.
  - 북한은 제안서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비방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와 다를 게 없으면서 미국이야말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음.
  - 또한 "주권과 존엄성이 확고히 보장되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인권침해 문제는 오히려 약육강식의 법칙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만연한 한국과 미국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함.
  
- **북, '주민신고 표창제' 시행(6/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민신고 표창제'를 시행해 벌써 주민신고에 의해 체포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여러 현지소식통들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신고내용에 대한 대가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새로운 '주민신고 표창제'의 기본 내용이라고 설명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인민반에서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주민신고 표창제'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고 밝힘.
  - 소식통에 따르면, 모든 범죄 신고는 당, 행정, 사법기관 간부들로 조직된 검열조직 '1118상무'에 하게 되어 신고된 범죄내용은 '1118상무'가 분류해 해당 사법기관들에 임무를 분담하게 됨.
  - 마약이나 매음행위(성매매), 도박 같은 범죄의 경우 북한 돈으로 5만원부터 30만원까지의 현금포상을 받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서 국가전복음모나 국가시설 파괴범죄 신고의 경우 북한 돈 천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음.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집단화된 범죄조직 적발과 주민통제에 한계가 있던 기존 검열방식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주민신고 표창제'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이 소식통은 '주민신고 표창제'가 시행된 후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며 "자강도 만포시에서만 마약제조범 19명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면서 주민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공포에 떨고 있다"고 '주민신고 표창제'의 해악을 강조했음.
  
- **북한, 한국 망명 선원 2명 송환 거둬 촉구...한국 거부(6/6, 미국의 소리)**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6일 대변인 담화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조해 자기 지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이자 국제 관



- 레라며, 북한 선원들의 조건 없는 송환을 한국 정부에 다시 촉구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한 대변인 담화에서는 이에 더하여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남측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인 선교사를 억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활용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처음부터 한국으로의 망명을 목적으로 출항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관계 당국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해 한국 사회 정착교육을 받게 될 예정임.

● 北, 미국인 3명 동시 억류...대미압박 극대화(6/6,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4월 29일 관광객으로 북한에 온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포울'(Jeffrey Edward Fowle) 씨를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히면서 현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미국인은 3명으로 늘어난다.

● 美국무부 "미국 시민 북한 여행하지 말라" 강력 권고(6/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방북한 미국인 관광객을 억류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미국 시민들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음.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은 이번이 세 번째"라며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시민의 안녕과 안전이 미국 정부의 최고 우선순위"라고 밝혔음.
- 하프 부대변인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개할만한 추가 정보가 없으며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될 경우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영사접근을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우리는 케네스 배를 비롯해 북한에 억류된 세 명의 석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북한에 제안한 대로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미국 시민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북한당국에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임의적 억류나 체포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했음.
-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미국인 제프레이 에드워드 포울씨가 호텔에 성경을 남겨둔 채 출국하려고 했다는 점을 억류 이유로 제시했다고 보도함.



## 2. 북한인권

### ● 스웨덴 "북, 조직적인 인권유린"(6/2, 자유아시아방송)

- 스웨덴 외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4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지적했음.
- 스웨덴 외무부의 만스 몰랜더(Måns Molander) 인권담당국장은 북한 인권 관련 부문이 15쪽에 걸쳐 작성됐다고 밝혔으며, 스웨덴의 연례 세계인권 보고서는 전 세계 공관이 있는 국가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눠 해마다 다른 지역에 관해 보고서를 발표하기 때문에 북한편이 발간된 것은 2011년 이후 3년만임.
- 몰랜더 국장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활동으로 스웨덴 정부도 북한의 정보 통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정확하고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인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 "북 청진수용소, 지역 경제 중요도 증가"(6/5,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정보분석업체 올소스 어널리시스(AllSource Analysis)는 지난해부터 1년여에 걸쳐 함경북도 청진의 25호 정치범수용소 위성사진을 관찰한 보고서를 5일 발표함.
- 보고서에서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의 25호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노역으로 인한 생산물이 인근 마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
-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수용소와 외곽 인근 마을을 잇는 철골천 600미터 구간에 다리가 3개나 있으며, 아주 잘 관리되어 있고, 강 주변에 축대쌓기나 토지 고르기 등 활발한 건설활동이 있는 걸로 봐서 25호 수용소가 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음.
-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고문, 영양결핍,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수용소 수감자들의 노역으로 북한 당국이 취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는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함.
- 올소스 어널리시스의 조셉 버뮤데즈 위성사진분석가는 북한이 정책적으로 개발투자를 하지 않는 외딴 동북지역에서 600미터 이내에 다리를 세 개나 건축해 유지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북한 당국이 경제적 이익 없이 이 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용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추론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2월 북한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5호 수용소 확장 등에 관한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 내용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담고 있음.
-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현존하는 다른 북한 수용소에서도 이와 같은 수감자의 노역 착취가 증가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 국제토론회서 북핵인권 토론(6/6,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정책연구소 '아시아소사이어티'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지난 3일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과 핵 위협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North Korea: What C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를 개최함.
-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압박정책이 필요하고, 미국의 민간단체들의 대북 의료·영양 지원이나 대북 방송을 통한 정보 유입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 한국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진실을 알리는 외부세계의 정보는 북한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함.
-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반 인도적 범죄에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으며, 지난 달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력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함.
-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링크의 송한나 대표는 한국과 미국 등지에 정착한 탈북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들이 북한 내 가족이나 친지와 전화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북한 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
- 카타리나 젤위거 전 스위스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장은 북한과 국제사회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음.

**3. 탈북자**

● **'北 보위부 직파간첩' 홍모씨 참여재판 배제에 항고(6/2, 연합뉴스)**

-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 측이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항고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홍씨가 항고함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 북한 보위부 소속 공무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홍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이 장기화할 것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번복,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림.



- **미 하원, 중국 결의안서 탈북자 복송 문제 거론(6/3, 미국의 소리)**
  - 미국 하원이 텐안먼 사태 25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박해, 구금, 사형에 직면한 수 천 명의 탈북자들을 강제 복송하고 있는 사실도 인권 침해의 사례로 제시함.

####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 5. 납북자

- **일본 관방장관 "필요하면 북한 당국자 방일 요청"(6/2,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일 오전 정례회견에서 북한 당국자의 방일 가능성에 대해 "일본인 납북자, 특정실종자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납북자 조사에 착수한 단계에서 북일간 인적 왕래 규제 등을 완화할 방침임.
  -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어떤 조직과 구성으로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조사를 하는가를 보지 않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음.
  - 한편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이날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베이징 공항에서 '방일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측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특히 "모처럼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쌍방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사실상 대북 제재 완화 등 북일 합의 시황 이행을 일본 측에 촉구했음.
- **"北日합의에도 일본인 31%만 납치문제 해결 기대"(6/2, 연합뉴스)**
  -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납치문제가 해결점을 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31%에 그친 반면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7%에 달했으며, 13%는 답을 할 수 없다고 반응했음.
  -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낮은 기대감은 조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명확



하지 않고 납북자 전원 귀국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日, 北에 식량원조시 국제사회서 부정적의견 나올 것"(6/2,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일 합의안에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일본이 북한에 의미 있는 식량 원조를 하면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일본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판단할 국면이 되면 대북 압박에 일본의 원조가 변수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이 당국자는 북일 합의에 대해 "일본과 북한 사이에 막혀 있던 일이 처음으로 풀렸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선 안되며 북한의 숨통을 터줬다는 점에서 북일 합의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동북아에서 가장 고립되고 친구가 없는 두 나라가 합의한 것으로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 당국자는 이번 북일 합의의 내용과 관련, "범위와 접근성 면에서 과거와 다르며 이례적으로 크다"면서 "1945년부터 북한과 관련된 모든 일본인 문제를 다 보겠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으며, 북한 상주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접근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일본이 (조사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 또한 일본의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 "북한에 원조를 하는 것처럼 (일본에서) 그냥 가는 것은 없다"면서 "대북 송금 및 후대금액 완화도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아닌) 200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한다"고 전했다.

● 日외무상 "납치문제 해결위해 총리 방북도 검토"(6/3,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답변을 통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전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다만 아베 총리의 구체적인 방북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음.
-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유럽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하네다(羽田)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북 전망을 질문받자 "지금 판단하는 것은 경솔하다"며 신중론을 폈음.
- 앞서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일환으로 실시 중인 북한 만경봉 92호의 입항 금지 조치에 대해 "(북한의 납북자 재조사 개시후에도) 입항을 허용할 예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일본서 납북가능 특정실종자 전국대회(6/3, 자유아시아방송)

- 일본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 아라키 가즈히로 대표는 3일 도쿄에서 일본 언론과 국민을 위한 특정실종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아라키 대표는 언론에서 잘 다루지지 않았던 납북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특정실종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전하며 이 단체가 작성한 470여 명의 특정실종자와 일본 경찰에서 분류한 820여 명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 납북자의 직업, 경력, 실종 상황 등을 담은 목록을 작성해 발표하고 있는 이 단체는 앞서 실종 납북 일본인 중 일부가 북핵개발과 위조지폐 제조 등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음.
  -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오는 7일 납북 추정자 후지타 스스무 씨의 남동생 후지타 다카시 씨가 창립한 '재회넷' 등 인권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잊지말자, 특정실종자'라는 제목으로 6월 내내 가두선전과 서명운동, 납치와 특정실종자 관련 그림과 사진전시회가 도쿄와 아키타, 오사카, 치바 등 각지에서 열림.
- 송일호 "조사위구성 조정 중...책임감 있게 준비"(6/5, 연합뉴스)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5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평양발 인터뷰에서 북한과 일본의 합의에 따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전면 재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내부 조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음.
    - 송 대사는 납치 피해자를 포함해 관련된 모든 일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사가 "예전의 (납치문제) 조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과 일본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조사위원회의 발족 시기나 조사 기간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올해 3월에 몽골에서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와 메구미의 딸 김은경 씨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반대한 적이 없다"고 설명함.
    - 북한이 만약 제4차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하는 경우 북한과 일본의 합의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그것은 일본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언급했음.
  - G7 정상회의서 북한 핵납북자 문제 관심 모아(6/5, 연합뉴스)
    - 브뤼셀에서 4~5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와 인권침해 대책, 납북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지고 공동선언에 포함됨.
    - G7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는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에서 드러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거듭 우려하면서 북한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음.
    - 특히 납치 문제를 포함, 인권 규정 위반 행위를 다루는 데 북한은 관련 유엔기구와 협력해야 한다고 이 성명은 덧붙였다.



- 법원 "국가, 간첩누명 납북어부에 13억 지급해라"(6/6, 뉴스토마토)
  - 간첩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의 유가족이 13억여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됨.
  -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는 간첩누명을 쓰고 복역한 납북어부 고(故) 이 모 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3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보안부대 수사관은 영장없이 고인을 연행해 구금하고, 구타와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증거를 조작했다"며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공무집행의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국가가 위한위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 이 씨는 1971년 9월 대북호를 타고 어로정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으며, 북한은 1년 후에 이씨를 대한민국에 송환했음.
  - 송환 후 이 씨는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10여년이 흐른 후 1983년 11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됐는데 북에 끌려갔을 당시 사상교육을 받고 포섭돼 노동당에 입당한 뒤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와 지하당 구축을 꾀했다는 이씨의 자백이 증거였음.
  - 당시 자백은 영장없이 끌려가 33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갖가지 고문을 받은 끝에 나온 허위자백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이 씨에게 징역 17년과 자격정지 17년을 선고했으며, 이 씨는 이 판결로 149개월을 복역하다 1998년 8월 가석방됨.
  - 이 씨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으며 과거사위는 2010년 이 사건에 진실규명결정을 내렸음.
  - 유족은 과거사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불법수사로 이뤄진 자백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 7. 대북지원

- WFP 5월 대북 식량지원, 올 들어 최고(6/3, 미국의 소리)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 5월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가 올 들



어 최고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주민 한 명 당 배급 식량은 전달에 비해 줄었다고 발표함.

- 디르크 슈테겐 WFP 평양사무소장은 지난달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 84만 8백 명에게 2천587t의 식량을 분배했으나, 한 달에 1만t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점을 밝힘.
- WFP는 내년 6월 말까지 대북 사업에 약 2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1일 현재 24%인 4천8백만 달러 밖에 모금하지 못해 북한 내 영양과자공장 7 곳 가운데 5 곳이 가동중단 상태에 있음.
- 한편, 북한 당국은 5월에 주민 한 명당 하루 410그램의 식량을 분배했으며, 이는 한 달 전인 4월보다 10그램이 감소한 것으로 WFP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 그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임.
- 5월 분배 식량은 쌀 20~40%, 강냉이 60~80% 비율로 구성됐음.

#### ● WFP, 한국어구사 요원 추가 평양 파견(6/3,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에서 진행 중인 영양지원 사업의 분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국제요원을 추가로 평양사무소에 파견할 계획임.
- 슈테겐 소장은 지난해 '분배감시 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양해각서(MOU)에 북한 당국과 세계식량계획이 서명했다면서 한국어 가능 감시 요원의 충원도 분배감시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함.

#### ● 정부, 5·24조치 후 첫 민간 대북 농업지원 승인(6/4, 연합뉴스)

-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 지원을 승인했음.
- 통일부는 4일 경남통일농업협회가 신청한 딸기 모종과 재배용 흙, 소독약 등 3천300만원 어치 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 또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우리 측 농업 기술자들이 평양 순안구역을 방문, 현지 농민들에게 딸기 생산 기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
- 이번 지원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정부가 5·24조치 이후 사실상 금지해온 대북 농업 지원을 다시 허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북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음.
- 정부는 상대적으로 운신이 자유로운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 지원을 시작으로 당국 차원의 남북 농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됨.
-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주민 사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단체의 농업 분야대북 지원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실질적으로 대북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음.

#### ● UNIDO, 북한서 5개 환경지원사업(6/5,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4일 공개된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 기술 지원 등 친환경 산업체계 구축을 위한 5가지 환경지원 사업을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음.

- 유엔공업개발기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에서 약 100만 달러의 예산으로 환경 관련 기술 지원을 하고 있음.
- 2007년 시작된 '환경 분야의 통합관리 기술에 대한 국제상담과 지원을 돕는 사업'에 전체 예산 4분의 3에 해당하는 약 76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 약 68만 달러가 집행됐으며, 이 중 약 10만 달러가 지난해 지출됐음.
- 나머지 4개 지원 사업은 2008년과 2011년 승인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과 관리 지원 사업들로, 2008년에 승인된 북한의 기상과 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통합관리 사업에 8만 달러의 예산을 초과한 약 8만 3천 달러가 집행됨.
- 또한 2011년에는 5만 달러의 예산으로 주로 단열재로 쓰이는 폴리우레탄 발포체 관련 분야 개발 지원을 시작했고, 2008년에 시작한 수소연화불화탄소 도입 사업의 연장을 위해 6만 5천 달러를 추가 배정한 바 있음.

● **FAO "북 방역 체계 개선 5개년 사업"(6/6,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향후 5년간 북한과 협력해 방역 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술 협력 사업(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Project)'을 펼칠 수 있도록 논의했음.
- 식량농업기구의 산드라 페라리 대변인은 식량농업기구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현지의 북한대표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북한의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또한 올해 초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한 '기술협력사업' 실행안을 북한 측에 보냈고, 북한 농무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국제기구 방역 지원과 관련한 성과 보고서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식량농업기구는 세계동물보건기구와 함께 이번 사업과 관련해 기부국들에게 기금 지원을 촉구하고, 북한에서 실시한 구제역 실사 결과와 동물 방역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전함.

**8. 북한동향**

- 김정은 黨 제1비서, '국제아동절(6.1)'을 맞아 평양애육원을 방문(6.2,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노동당, '국제아동절(6.1)'을 맞아 전국의 육아원·애육원과 김정숙탁아소·경상유치원·창광유치원에 물고기와 과일, 현대적인 냉동설비 등을 전달(6.1, 중앙통신)



- 서울고등법원의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선고와 대법원의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재심 무죄 판결(5.29)을 거론하며 '과거 파쇼 독재정권시기 조작된 모략사건들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6.1, 중앙방송)  
※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 1963년 대연평도에서 20톤급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北으로 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 된 사건
- 용인시에서 일어난 미군의 성추행 사건(5.31) 등을 거론하며 '미군 범죄행위는 하루도 그칠새 없이 감행되고 있다'고 비난 및 '박OO와 같은 친미분자들이 사대매국정치를 하고 있는 한 미군 범죄행위는 절대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6.3, 중앙통신)
- 北, 6월 2일 韓美의 '인권유린행위'를 주장하는 자료들을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A/68/869-S/2014/321호)으로 배포(6.3, 중앙통신)
  - △ 「조국전선」 과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 북측본부 발표(미국의 인권범죄 비망록\_미국이 조선민족에게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대범죄를 폭로·단죄한다), △조국통일연구원과 南 인권대책협회 발표(남조선 인권백서\_세계 최악의 남조선인권실태를 고발한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사(쓰디쓴 고백, 참담한 반인권현실)
-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한국 설치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권 위기의 심화를 막고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들어 놓은 저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반공화국 적대행위이며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6.4, 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유린자들의 모략 소동은 통할 수 없다)
- 일본이 '고노 담화' 검증을 위한 검증팀 만들고 첫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뒤집고 군국화, 우경화를 다그쳐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하며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6.4, 중앙통신·노동신문/반성의 길인가, 재침의 길인가)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